‘신문을 펼치면’

‘신문의 날’ 포스터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5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장 회장은 대회사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이 냉철한 분석과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포스터 현상공모에서 ‘신문을 펼치면’ 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차지한 정호균(24·순천시)·유은지(21·광주시 서구)씨 등 표어·포스터 당선자 1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또 광주일보 독자 김범호(58·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행탠)씨와 배달사원 안현섭(24·광주일보 남광지국)씨 등 회원사 모범독자와 배달사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F1 특별법 4월 처리 사실상 무산

25일 공청회 법안심사 등 일정 빠듯… 6월께 가능할 듯

의원들 공감대 형성 기대 못 미쳐 특단 대책 마련해야

F-1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한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기대에 못 미쳐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광주 남)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일정상 F-1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5일에 열리게 돼 있어 이번 회기 중 F-1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문광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가 25일 이후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F-1 특별법은 문광위 통과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특단의 방법을 동원,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F-1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의 등이 남아 있어 4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30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6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F-1 경기장 건설 등은 국토개발법에 의거 진행되므로 지원법인 F-1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특별법은 올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한 것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내부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1 특별법을 바라보는 국회의 눈초리는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전문위원들이 F-1 특별법에 대해 비판적 지적을 잇따라 내놓은데다 국회 문광위원들도 특별법의 절실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F-1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남도가 떼쓰는 형식으로 타 지역 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설득을 통해 의원들의 공감을 넓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조체제를 구축, 문광위원과 법사위원 설득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 설

‘호남 비하’ 망언 강동순 즉각 사퇴하라

강동순 방송위원회 위원의 ‘호남 비하’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한 강 위원은 녹취록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공직인 방송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망언을 한 강 위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강 위원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사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호남사람들은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를 안 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한반도를 통제해도 우리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호남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진짜로 민주화되려면 호남사람들이 깨야 된다”고도 했다.

강 위원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호남사람들을 ‘빨갱이 집단’으로 취급하고 민주화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음해했다. 이 무슨 해괴하고 몰상식한 망언인가. 강 위원이 무엇을 근거로 호남인들을 매도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호남을 평가한 것이지 비하한 것이 아니다’는 궁색한 해명에는 분노가 치민다.

강 위원은 한나라당 대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얘기했다. 그는 "정말로 방송이 중요한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방송보도) 모니터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방송위원은 정무직 차관급 공직자다.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에 임명됐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호남사람들을 매도한 강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호남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소록도 연도교 붕괴 참사 또 人災인가

5일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일부가 붕괴돼 인부 5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지반 위에 지지대와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마친 뒤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국내 최대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록도 연도교 붕괴 사고는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 덜 굳은 콘크리트의 무게를 지지대가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약해지거나 지지대의 이음매 부분이 헐거워 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레미콘의 압력으로 거푸집이 균형을 잃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고는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책임감리 회사로부터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았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건설사나 감리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일에도 화순 광업소 지하 갱에서는 석탄 운반용 궤도차가 이탈해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역시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였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평소 안전 점검을 게을리 하는 적당주의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기준 및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서라도 안전불감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 김홍업씨 전략공천 재확인

박상천 대표 당직 인선 마무리

부대표에 최인기·이낙연의원 등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이사장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신임 부대표단에 통합파 성향 현역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등 당 지도부를 화합형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중앙당 회의실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김홍업씨를 최종 후보로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김홍업씨 재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당은 지역 여론의 반발에 고전하고 있는 김씨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임 부대표를 임명하는 등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지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신임 부대표에 최인기, 이낙연 의원과 신낙균 전 수석부대표, 고재득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했으며 중앙위원회의는 이를 인준했다. 장 상 전 대표 체제에서 광주·전남 대표성을 인정해 부대표로 임명됐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부대표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심의기구로 권한이 강화된 대표단 회의에는 통합파 성향의 이낙연, 최인기, 김효석 의원 등이 참여하게 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화합형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사무총장으로는 김성순 전 의원이 임명됐으며 대변인에는 기존의 이상열, 유종필 투톱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부대변인에는 김정현, 김재두, 이기훈씨가 임명됐다.

한편, 박상천 대표는 지도부 및 대변인단 임명과 관련,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장 상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을 대거 포용한 것은 물론 추후 당직자 인선 과정에서도 능력을 최우선 임용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당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박 대표가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서거석 전북대총장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퇴출보다 무서운 인사제도 나올 것”

박명재 행자부 장관 밝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과 관련, 퇴출제 보다 더 무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을 순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퇴출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방안 마련은 기본적으로 중앙인사위 소관이며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퇴출보다는 성과와 경쟁을 통한 인사쇄신이 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김태호 도지사와 실.국장,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보고회에서도 “현재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너무 폐쇄적”이라며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복지와 주거, 문화 등 232개 항목에 걸쳐 리스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시.도도 이 분야에 최고의 인력을 배치해 행정의 열매를 주민들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그는 “정부도 (농가 등 피해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방 순회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

DJ, 전북대 특강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일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과 관련,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고 나아가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일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6·25 전쟁을 법적으로 마무리짓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전북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2007년은 6·15 정상회담에 이은 제 2차 해빙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야말로 한반도에서 오랜 숙제인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도 금년 안에 열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조치와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전망과 관련, “북한경제는 전면적인 파탄상태로 식량, 공업제품 등 뭐하나 제대로 되는 분야가 없다”며 “결국 미국과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내가 알기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가장 바라는 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어떻게 보면 측은할 정도로 바란다”고 밝혔다.

당기 순이익 1조원…재계 8위 급부상

금호아시아나 창립 61주년

지난해 대우건설 인수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7일로 창립 61주년을 맞는다.

금호아시아나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재계 순위에서 그동안 10위권 밖을 맴돌다 지난해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창립 61주년인 올해 GS(25조)와 한진(23조)에 이어 재계 8위(18조9천억원)까지 급부상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하반기 대한통운 인수에 나서 다시 한번 재계 판도를 휘저을 태세다. 또한 광화문 그룹 사옥 앞에 제2사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매출 21조35억원, 당기 순이익 1조951억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0조원, 당기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연다는 야심찬 목표도 갖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

빛日만평

- 김종두

지지율 100%에 도전을…

“녹취록 파문 강동순 사퇴해야”

국회 문광위 여야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는 6일 강동순 방송위원의 호남비하 발언 녹취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은 “방송위원의 중립성 의무를 훼손했다”며 강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그를 추천했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열거한 뒤 “방송위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위해 방송위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당 대선주자의 최측근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유리한 지를 조언한 내용은 경악할 만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방송위원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다 해도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라며 “공정한 방송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 데 이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녹취록에 담긴 ‘호남 비하’ 발언을 언급, “호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말할 수 있다고 보느냐. 방송위원이란 공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죠”라며 ‘방어성’ 질문을 던졌다.

강 위원은 계속되는 공세에 대해 “녹취록 내용 일부는 사실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한 이야기였으며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한 말이었다. 공적 활동과 연결시킨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사퇴 요구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거취에 대해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물러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좌진 월급 사용은 자발적 의사 따른 것”

유선호 의원 보좌진 해명

유선호 의원 보좌진은 6일 ‘보좌진 월급 유용 의혹’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좌진들이 서울 의원회관 운영비와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좌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 보좌진들은 또한 “유선호 의원은 보좌진들이 월급 일부를 모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암묵적인 동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인 해외유학 외국인 국내유학의 6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숫자가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수의 6배에 달하는 등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19만364명에 달한데 비해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6분의 1 수준인 3만2천557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유학과 해외연수 관련 교육수지도 지난해 44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